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4. 5.(월) 배포</p>			
보도일	<p><b>2021. 4. 6.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4. 5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</b></p>				
담당과	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담당자	과 장	천범산 (☎ 044-203-6883)	
			사무관	김홍오 (☎ 044-203-6313)	
			사무관	김진욱 (☎ 044-203-6806)	

**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, 「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**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3.30.(화) 제3차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에 따른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  -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i)일자리, ii)주거, iii)교육, iv)복지·문화, v)참여·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되었다.
    - ※ (과제 수) 교육부(37개), 문체부(37개), 고용부(36개), 국토부(31개), 과기부(21개) 順 (예산) 국토부(8.5조), 고용부(6.1조), 교육부(5.0조), 문체부(0.9조), 중기부(0.8조) 順
-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.
  - 기숙사 확충(+6천 명),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(520만 원 → 700만 원, +180만 원),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(1.85% → 1.7%, △0.15%p) 등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.
  - 디지털 혁신공유대학(약 48개교), 마이스터대 운영(5개교),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(2025년까지 3만 개) 및 취업지원관 배치(517명 → 700명, +183명) 등 청년 미래역량 강화와 취업준비 지원이 이루어진다.

-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(8천 명 → 1.5만 명, +7천 명 / 35만 원 → 최대 70만 원, +35만 원),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된다.
  -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,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(원)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.
- 교육부 관계자는 “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,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·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 교육부 소관 주요과제



**① 대학생 주거 부담완화(안건 23쪽)**

-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(6천명)하고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('20년 33% → '21년 36%), 카드납부('20년 21% → '21년 24%) 비율을 확대

**② 대학생 교육비 부담완화(안건 26쪽)**

-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('20년 520만원 → '22년 700만원)하고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('20년 56% → '21년 70% → '22년 폐지)와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\*도 병행

\* 대출금리 인하('20년 1.85% → '21년 1.7%) / 실직·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/ 사망·심신장애인 채무면제

**③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(안건 26쪽)**

-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('20년 7천명 → '21년 9천명)과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('20년 8천명, 35만원 → '21년 1.5만명, 최대 70만원)을 확대

**④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(안건 27쪽)**

- 지자체 -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('20년 3개 → '21년 4개)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\*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\*\* 추진

\*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 배분방향 반영

\*\* 국립대 기존 사업의 단계적 개편·통합 등으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마련

**⑤ 청년 미래역량 강화(안건 27쪽)**

-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을 지원하고(8개 분야, 약 48교) 산업계 및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 추진

⑥ **고졸청년 취업 지원**(안건 28쪽)

-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\*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\*\*, 취업지원관 배치\*\*\* 등 고졸취업 지원 강화

\* 현장실습생(월평균 60만원) 및 기업현장교사(월평균 50만원) 수당지원,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('25년까지 3만개)

\*\* '20년 4백만원 → '21년 5백만원

\*\*\* '20년 517명 → '21년 700명

⑦ **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**(안건 29쪽)

- 마이스터대 시범운영('21년 5교) 및 관련 법령 개정(고등교육법 내 설치·운영 규정 마련)에 착수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을 지정·운영('21년 12교)

⑧ **온택트 교육기반 구축**(안건 29쪽)

- K-MOOC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('20년 27개 → '21년 추가 확대) 등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(평생배움터)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(ISP) 마련

⑨ **대학(원)생 복지지원 강화**(안건 30, 31쪽)

-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 추진,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대학(원)생 교육여건 개선\*

\* 원격수업 보조 지원(교당 연 720만원 → 1천만원) / 교육지원인력 시급 증액(일반대 16%↑, 전문대 19%↑)

⑩ **대학(원)생 참여권리 보호**(안건 33, 34쪽)

-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참여 비율이 10%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\* 추진

\* 「고등교육법」 개정('21.3.23.)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